



다. USPS는 민간회사들과 똑같은 우정 사업을 영위하면서 우편 비용을 받는 회사이다. 민간경쟁사들이 우편 배송에서의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비해, USPS에 대한 법적 규제는 너무나도 허술하다.

USPS의 법적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간인이 우편 발송에 도움이 되는 스캔 및 발송과 관련한 신기술을 개발하면, USPS는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 개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USPS로부터의 소정의 보상뿐이다. USPS가 매년 36억 달러의 보조금을 납세자들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도, 내가 납세자 권리 보호동맹에서 일하면서 알 수 있었던 대목이다. 그런 USPS가 특허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USPS는 자유로운 특허 사용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에 우편 관련 특허들을 기한에 상관없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현안을 통과시킨다면, USPS는 오늘날 수많은 특허 개발자들이 매달려있는 스캐닝 기술과 우편 발송 관련 혁신적 신기술들을 기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깨뜨릴 때이다. USPS가 법적 특혜를 더 얻어내기 전에, 의회는 USPS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직혁신을 추구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USPS가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이용해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로지 올바른 법의 제정만이 USPS의 문제를 해결하여, USPS가 다시 미국 국민의 우체국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post-office-is-above-the-law-and-we-all-pay-the-price/>